

일본의 평화운동: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지난 7-8년간 진행되어온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일본 측 상황을 정리하고, 일본에서 운동이 쇠퇴한 요인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간의 연구문헌조사, 신문자료 및 운동단체·정부 발간물 등의 일차자료 조사에 더해 운동단체 및 운동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참여관찰을 시도했으며, 50여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 문제를 위한 일본의 사회운동은 정부-우파여론-긴 역사와 큰 규모의 기성 단체-난립한 소그룹이라는 네 행위자 간의 역학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운동은 소그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군위안부문제의 경우, 한국에서 제기된 운동이 기성단체에서 흡수·확산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소그룹이 운동의 바톤을 이어 받았다. 이 단계에서 보수우파의 공격이 시작되고 정부는 이를 등에 업고 '국민기금'의 시행이라는 강경한 정책을 수립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기성단체들이 합류하여, 운동의 불씨는 소그룹들이 키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 소그룹들은 수는 많으나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힘을 분산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운동은 극히 약화된 상태에 있다. 이 운동은 처음 여성운동에서 출발했지만 곧 남성을 포함한 시민운동(전후보상운동, 재일한국인운동, 지역운동, 기독교운동, 노동운동 및 기타 인권운동)으로 확산되었으나, 어느 운동분야에서도 위의 소그룹 중심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상황은 전쟁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 사회운동 전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I. 머리말

1980년대말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후, 차츰 사회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1990년 6월, 일본에서 한 사회당 의원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에 전시 군위안부에 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물론 이 요청은 일언지하에 거절되었지만, 한국에서 잇달아 확산된 사회운동과 발맞추어 일본에서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여성운동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시민운동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그것은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지만,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의 한 주요한 흐름을 이루며 다른 사회운동에도 곳곳에 스며있던 평화운동의 맥에서 형성된 것

* 이 글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과제 보고서로서 제출된 글임.

이였으며, 197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그 존재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후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모습을 이루어온 재일한국·조선인의 운동이 기반이 되었고, 기독교운동, 노동운동, 보수적인 지역운동까지도 이 운동의 터밭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정부와 이 문제에 악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일본 사회에서 의연히 버티고 있는 일본의 양심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일본정부가 1994년 후반부터 추진하여 1995년 6월에 공식 발표한 '아시아 여성 평화우호기금(이하 국민기금으로 약칭)'의 시행을 둘러싸고 분열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운동에 왜 일본의 시민단체는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 단체들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가. 결국 왜 그들 중 많은 부분이 정부의 국민기금 시행에 협력하고 말았는가. 이들은 한국의 운동단체들과 어떠한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가. 이들의 운동에서 일본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글은 다음의 세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첫째는 문헌조사로서, 기존의 연구물을 참고한 데 더해, 일본 운동단체들의 팸플렛, 뉴스레터, 자료집 등의 출판물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필자가 1997년 1월에 시행한 일본 운동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된 50여 단체에 설문지를 보냈으나 회수된 것은 20부에 불과하여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는 별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질문이 대부분 개방적인 것이었으므로 일본단체들의 내용분석에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지난 5-6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접했던 많은 단체들의 실무자들과의 면담과 이들의 활동에의 참여관찰이 이 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운동화 되어온 과정을 시기에 따라 고찰하고, 다음으로 운동단체를 평화운동, 여성운동 등의 기존의 운동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정리한 후, 운동의 내용과 쟁점을 논의할 것이다.

II. 운동의 발단과 전개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에서 전쟁문제, 좁게는 전후처리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은 일찍부터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일본의 폭력을 비판하는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운동은 사실상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운동이 촉발된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인 1990년의 일이다. 이후 일본의 운동은 시작의 시기, 본격적으로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 그간의 운동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시기, 그리고 국민기금을 둘러싼 분열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에 따른 운동의 변화는 한국에서의 운동, 일본정부의 태도 및 이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제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 문제의 인식과 운동의 형성: 1988-1991

일본에서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서적은 이미 1970년대에 출판된 적이 있으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역시 한국에서 운동이 시작된 이후이다. 1988년 한국의 교회여성연합회와 윤정옥 교수가 처음으로 군위안부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일본의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 이전부터 일본인의 매춘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던 ‘賣買春問題ととりくむ會’가 이를 도우며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나(다카하시 기쿠에, 1992: 36)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이 문제를 받아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운동과 정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¹⁾ 1990년 초에 사회당 국회의원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가 국회에서 질문을 한 후, 1990년 6월 6일 사회당 의원 모토오가 쇼지(本岡昭次)가 다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것은 민간업자가 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곧 묵살되었고(정진성, 1995: 179), 이어 한국의 단체들이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정부에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운동을 벌였다. 1991년 가이후 수상 방한 시기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등, 일본정부에 대한 운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때에 위 쇼지 의원이 1991년 4월에 재차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일본정부는 또다시 정부가 이 문제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1965년 한일협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크게 잇슈화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제기되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운동단체들은 군위안부 문제에 한국의 활동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고, 일본정부에 요청을 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렇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운동해왔던 기존의 단체들이 부수적인 활동으로 벌이던 것에서 이 문제를 위해 새롭게 단체가 결성된 것은 재일한국인 집단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1년 5월 오사카에서 ‘조선인 중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가 설립되었고, 11월에는 ‘從軍慰安婦問題ウリ女性ネットワーク’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출판활동, 강연회 등을 벌이며, 이 문제에 집중했다.

2. 본격적인 운동의 전개: 1991년말-1993

1) 운동의 계기

한국에서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으로 약칭)’가 결성되고 일본에서도 차츰 이 문제가 사회전반에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

1) 일본의 사회운동이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줄고에서 밝히고 있다 (정진성, 1996).

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최초의 피해자 증언이 이루어지고 9월에 신고전화가 개설된 것과, 1991년 11월에 미국에서, 1992년 1월에는 일본에서 관계 군문서가 발굴되어 여론이 크게 비등하게 된 것도 일본에서 운동이 본격화된 계기가 되었다.

2) 기존 단체의 참여와 새로운 단체의 결성

기존의 여성단체가 참여하기 시작하고, 재일한국인 집단에서 이 문제만을 위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던 전 시기에 이어, 기존의 여성단체 및 남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에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 문제를 위한 새로운 단체들의 결성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할 것이지만, 운동에의 참여는 ‘日本婦人會議,’ ‘YWCA,’ ‘アジアの女たちの會’ 등의 기존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시작하여, ‘NCC,’ ‘전후보상을 위한 제 단체 및 교회,’ ‘노동조합,’ ‘교사모임’에 이르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에까지 확대되었다.

새롭게 결성된 단체도 다양하여, 松代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松代・朝鮮人慰安婦の家を殘そう實行委員會’ (1991년 6월, 후에 ‘もうひとつの歴史館・松代建設實行委員會’로 개칭),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ふたたび從軍慰安婦をつくる下町の會’ (1991년 11월), 전후보상 전반을 다루지만 위안부 문제에도 깊이 관여한 시민단체인 ‘日本の戦後責任を確きりさせる會’ (1991년 12월), 그밖에 지역조직의 활동 중에 특별한 계기를 맞아 새로운 단체를 발족시킨 것, 예를 들면 ‘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福山’ (1992년 12월) 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단체가 결성되는데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한국의 활동가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방문 강연, 관계 필름 상영이나 공연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ききょの會’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들도 만들어졌다.

이밖에 기존의 단체로서 이 문제를 중요한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중심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회적인 행사를 열거나 원조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다수 생겨났다. ‘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連帶會議 (AALA), 노동조합의 어떤 부분, 지역단체들이 그것이다.

3) 연합단체의 결성과 신고전화 개설

이러한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92년 8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연대회의를 위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던 여러 운동단체들 (16개)이 1992년 1월에 연대모임인 ‘行動network’를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대협과 같이 여러 단체가 연대하지만 통일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라기보다는, 각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각기 다른 운동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주로 외국 (한국이 대부분) 과의 관계에서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느슨한 조직이다.²⁾ 한국의 정대협이 많은 일본 단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行動network’를 통해 연락하도록 한 것은 이후 활동에

신속성과 체계성을 가져 왔지만, 이것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단체를 포괄하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이후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면서 차츰 약화되었다.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에서 한 것과 같은 피해자 및 가해자 신고를 받는 전화가 설치된 것이다. ‘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日本の戦後責任を確きりさせる會,’ ‘在日韓民主女性會’ 및 ‘從軍慰安婦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의 네 단체가 발기인이 되어 1992년 1월에 ‘從軍慰安婦110番(hot line)’을 개설했다. 여기에 ‘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 ‘日本キリスト教婦人教風會,’ ‘東京YWCA,’ ‘日本婦人會議,’ ‘アジアの賣買春に反對する男たちの會,’ ‘松代・朝鮮人慰安婦の家を殘そう實行委員會’의 회원들,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전화로 피해자 및 경험자들의 신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피해자보다는 군인들이 다수 신고하여 위안부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것은 『從軍慰安婦 110番』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從軍慰安婦110番 編輯委員會 編, 1992).

4) 연구자, 변호사 등 지식인 참여의 확대

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참가도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吉見義明 교수 등이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중요한 업적을 세운 바 있으며, 이후 역사학자, 사회학자, 저널리스트, 여성학자 등 많은 연구자가 이 문제의 진상 발굴과 학문적 해석을 시도했다. 일본정부가 1992년 7월에 정부 소장 자료를 공개하기 전인 1992년에 군위안부 관계 군문서 및 정부 문서를 모아 자료집을 출판한 재일 학자 琴秉洞도 이 시기의 운동 및 연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모여 단체를 만들어 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연구활동을 벌인 것은 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되었다. 일찍부터 징용, 징병문제의 진상조사를 해온 북한계 재일학자 그룹인 조선인간제연행진상조사단이 이 문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새롭게 결성된 단체로 吉見義明 교수와 荒井信一 등 역사학자들과 여러 젊은 회원들이 모여 1993년 7월에 만든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는 그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것은 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문제의식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포로문제, 독가스, 세균전 문제 등 보다 광범위한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季刊戦争責任研究』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면서, 1993년 8월과 12월에 한국의 정대협과 함께 군위안부 문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뒤에 언급할 PCA(국제중재재판소)에의 제소를 위한 움직임에 정대협과 보조를 맞추는 등,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1993--). 이밖에 ‘グループ・性と天皇制を考える會,’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女たちの會’ 등 기존의 단체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

2) 일본에서 이러한 연락회 형태의 연합 조직은 대체로 국제대회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1975년 UN 세계여성회의 해 대회 참석을 위해 만들어진 ‘國際婦人年連絡會’, 1995년 폐경대회 중에 만들어진 ‘Beijing JAC’ 등이 그것이다.

고, 새롭게 결성된 단체들도 학습회 형태의 모임을 발전시켰다.

앞서 언급한 ‘정대협,’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합동 연구회 외에 일본에서 연구자의 연구보고 및 피해자 증언을 포함한 많은 심포지엄이 열렸고, 여기에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군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심포지엄 외에도 전후보상문제, 또는 여성억압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에서 연구 결과물을 내는데 매우 조심스러운데 비해 일본에서는 개별연구자나 단체의 이름으로 수많은 군위안부 관계 출판물을 내놓았다. 이 중에는 전문적인 깊이있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³⁾ 단편적이거나 다소 왜곡된 점도 들어있는 출판물도 적지 않다.⁴⁾ 이러한 연구 결과물에 더해, 위 많은 단체들이 발행하는 정식 출판물이나, 팸플렛, 활동보고, 자료집 등의 소위 ‘미니코미’⁵⁾가 다수 출판되었다.

운동의 확대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참여는, 이 문제의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한국 정대협의 UN에서의 활동에 戸塚悦郎 변호사의 도움은 헌신적인 것이었으며, 후에 국민기금 시행을 둘러싸고 한국측 및 대다수 일본 운동단체와 입장을 달리하게 되긴 했지만, 재판에 깊숙히 관여해온 高木健一, 여성변호사로 초기에 도움을 준 福島みずほ, 지역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井上正信 변호사 등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며, 다음 시기 PCA 제소 운동에서 더욱 많은 변호사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은 ‘日本辯護士聯合會’의 참여이다. 1993년 6월 비엔나 UN 인권대회에 이 회의 참여하여 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日本辯護士聯合會, 1993).

5) 전후보상문제 전반으로의 관심 확대

일본에서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은 앞서 언급한 북한계 재일한인 그룹과 소수의 일본 학자들⁶⁾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것에 더해, 1970년대 후반부터 재일한국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會, 1989). 그러나 이것은 주로 재일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상 겪는 차별과 불이익과 싸우는 것이 중심이 된 것으로서, 전후보상은 그것을 위한 보다 넓은 법적 기반으로서의 관심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전후보상운동이 연구

3) 鈴木裕子(1992), 吉見義明(1992) 등.

4) 예컨대 倉橋正直의 저서 (1994)는 군위안부를 동원 형태에 따라 구분했는데 그중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自願에 의한 것을 하나의 주요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5) 미니코미란 정식 출판물이 아니라 운동단체들간에 유포되는 팸플렛, 소책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회운동 발전과정에서 1960년대 후반경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해진다.

6) 田中宏 등.

7)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일한국인의 운동은 특히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とも

와 구체적인 법적 소송의 형태를 띠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론 지난 시기부터 이루어져온 연구와 운동으로부터 발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군위안부 문제의 사회운동화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전후보상문제연구회는 1988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입법화된 것에 자극을 받고 성립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중군위안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戰後報償問題研究會, 1990: 4)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戰後報償を考える湘南市民の會’ (1991.2), ‘戰後責任を問う關釜裁判を援する會’ (1993.4),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會’ (1993) 등, 전후보상문제 전반을 위한 활동, 또는 특히 재판을 돕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재판은 동경, 후쿠오카 등 여러 지역에서 군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징용, 징병, 우편저금 문제 등을 포괄하여 이루어지고 새로운 단체 외에도 앞서 언급한 ‘ハッキリ會,’ ‘從軍慰安婦問題行動ネットワーク’ 및 많은 변호사들이 이를 돕고 있다 (후쿠시마 미즈호, 1992: 43-45). 이것은 운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위안감을 주는 것으로서 일본 전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 특히 일본정부의 사실인정 등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추이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후보상문제가 전 시기에 재일한국인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서 접근되었던 것처럼, 군위안부 문제의 설명기반으로서 관심을 받았던 것만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 영역으로, 군위안부 문제에서, 731부대, 근로정신대, 징용, 징병 등의 문제 및 세계의 전후보상에 관한 비교연구 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넓어진 것⁸⁾은 이 운동의 중요한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한편에서 꾸준히 전개되어왔던 역사교과서 문제도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6)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⁹⁾

이와 같이 자료가 발굴되고, 피해자가 증언하고,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처음의 완강한 부인의 태도에서 다소 물러섰다. 앞서 본대로 일본정부는 처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군의 개입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이 시기에 다소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민간업자들이 한 일로서 정부차원의 조사는 불가하다는 처음의 입장에서부터, 1991년 12월 정부가 이 문제를 위해 6개 관계부처에 사실조사를 지시한 것은(1991. 12.12. 참의원 예산예산위원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1992년 미야자와 수상

にいきる)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

8)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戦後報償問題研究會 등의 연구물에서 전후보상의 다양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 이 부분은 줄고(1995)를 참고할 것.

은 한국에 와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중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며, 일본은 다시 그와 같은 과오를 거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끝이어서 일본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1992.1.29).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법상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의 범죄성과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1992년 7월 6일 6개 省.廳을 조사한 일본정부의 보고서는 정신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강제연행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 소장의 문서자료에만 의존했던 이 1차 조사결과를 낸 후, 일본정부는 미국국립공문서관등의 자료 및 정대협 등의 출판물을 보충하고 피해자 증언을 참고하여 1993년 8월 4일에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을 인정했으나, 그 대부분이 민간업자에 의한 것으로 강제연행의 주체를 어디까지나 정부는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비슷한 시기에 호소카와(細川)수상은 제2차세계대전이 침략전쟁임을 인정했다(1993.8.10).

처음의 사실 자체에 대한 완강한 부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책임과 정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서, 이후 새로운 보수화로 이어졌다.

3. 운동의 약화와 대안적 방식의 모색: 1993년 말-1994년 8월

일본정부가 이제까지의 긍정적 변화로부터 돌연 보수화되고 일본의 보수적 여론이 강화되는 한편, 한국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및 PCA 제소를 위한 움직임으로 운동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일본의 시민단체들의 운동은 지금까지의 본격적 확대에서 다소 주춤하고 운동단체들간에도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 일본정부 태도의 보수적 변화와 여론의 악화¹⁰⁾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2차보고서를 낸 것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이 문제의 종결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입장이란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처음부터의 입장을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었고, 종결안이란 1994년 8월에 국민기금안의 발표에서 구체화된, 법적 배상이 아닌 도덕적,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이었다. 1993년 말부터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1993년 3월에 한국정부가 표명한,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만을 촉구하는 공식적 입장이 뒷받침한 꼴이 된 것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1993년 11월 호소카와 수상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일 수뇌회담에서 공론화되었다(이효재, 1997: 329). 때를 같이해 나가노 법무상, 사쿠라

10) 이 부분도 줄고(1995)를 참조할 것.

이 환경청 장관, 하시모토 통산상, 이가라시 관방장관 등의 망언이 계속되었으며, 보수적 여론이 기세 등등해졌다.

이 시기 주요 일본의 잡지들에 거의 빠짐없이 게재되었던 보수적 여론들은 그 정도를 지나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데서 출발하여,¹¹⁾ 군 위안부 문제는 그 시기의 필요악이며 나아가 주둔지 여성을 보호하려는 우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더우기 그때 과거청산의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금의 한국의 경제부흥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동경지방법원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소송 중인 재판과, UN 및 ICJ(국제변호사협회), PCA 등의 국제적 심판의場に 일본정부가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UN에서 다른 서구 여러 나라들의 잘못들은 제쳐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역점을 두어 주장하는 점 중의 하나는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가난 때문에 여자들이 위안부로 자원해 갔거나, 부모가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의 새로운 운동전략과 일본 운동단체의 분열 조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피해자들도 절망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운동전략을 내세웠다. 그것은 지금까지 배상문제에 집중되었던 사회적 관심을 돌려, 책임자 처벌 문제로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이었다. 일본 검찰에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과 PCA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UN과 ICJ 등의 국제기구들이 구속력이 없는 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은 승산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모두가 일본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994년 2월 정대협과 피해자들이 일본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시켰으나 거부당했으며, PCA 제소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많은 변호사들이 노력했으나, 1995년 1월 결국 일본정부는 PCA 제소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의 범죄성에 대한 다소 추상적인 비판에서 뜻을 같이했던 일본의 운동단체 및 개인들이 구체적인 책임자 처벌이라는 형사적 문제에 부딪치면서 분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 운동에 적극 협력했던 사회당계 日本婦人會議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은 한국에서 책임자 처벌을 고집할 경우, 일본에서 적지 않은 단체들이 이탈할 것임을 경고했고, 이후 일본부인회회는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안의 시행에 동조하는 적대적 세력으로 변화했다. 이밖에도 많은 일본의 시민단체들에서 이미 죽었거나

11) '일본의 조선 지배는 그 시대로서는 당연한 역사적 흐름이며,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반성·사죄하는 것은 「先人」들의 노력과 명예를 밝아버리는 것이며, 숨진 230만 영령들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 1993.8.11; 한겨레신문, 1993.8.12; 조선일보, 1995.2.4).

나이 많은 사람들, 천황에까지 그 책임이 분명히 물어질, 책임자들을 이제 세삼 처벌하자는데 주저함을 보였고, 그렇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운동에 지친 단체들은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열은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안을 둘러싸고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III.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안 발표와 운동 지형의 변화: 1994년 8월 이후

1.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안

ICJ의 잇단 배상 권고안 (1994.9.2; 11.22)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야당은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안을 발표했다. 8월 무라야마 총리는 (1994.8.31) '우리나라의 침략 행위나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이며,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면서, 소위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을 거부하고, 대신 아시아 피해국을 대상으로 10년간 1000억엔 상당의 사업으로 조사·연구·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함께 탐구해 나가고 싶다'는 말로, 민간모금 조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12월 自民黨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1994.12.7). 일본여당 내 종군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종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해서 지난 대전에 일어난 배상, 재산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로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양국간의 평화조약 및 기타 관련된 조약 등에 따라서 국제법상, 외교상 성실히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도의적 입장에서...폭넓은 국민참가로서' 기금을 모아 전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는 이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이 문제 최종해결안으로 발표했다. 앞서 본대로 1995년 1월에는 PCA에 이 문제를 상징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요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 단체들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서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갈 필요없다고 외무성에서 정식 답변했고, 위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를 견지했다. 1995년 7월 마침내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이 발족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범죄성과 법적 책임을 인정치 않은 채,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에 의해, 배상이 아닌 위로금으로,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이다.

2. 운동의 분화

법적 책임을 부인하여 민간모금과 정부의 보조금을 국민기금이라는 민간기구의 틀을 빌어 지급하려는 이 시도를 둘러싸고 일본의 시민단체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서의 책임자 처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분열은 보다 복잡해지

고 확실해졌다. 국민기금은 일본의 각 부분에서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로비도 공격적으로 행하여 국제여론과 일본의 시민들 사이에서 세를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를 위해 일하던 단체들은 국민기금에 찬성·협력하는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단체로 크게 분열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가뜩이나 세가 줄은데다 그안에 서로 행동방침을 달리 하는 여러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그간의 활동하던 단체 중 해체된 것들이 많아지고 새롭게 단체가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대하는 단체들 내에 보이는 분열은 총체적으로 국민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순수하게 시민기금을 만들고자하는 입장, 정부의 출자금 부분을 입법화하려는 입장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국민기금의 지급을 막기 위해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모금활동을 벌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민기금과의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일본의 기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국민기금에서 정부 출자금과 민간 모금의 구분을 제안하는 등, 국민기금의 성격을 바꾸고자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어, 운동의 지형은 매우 복잡하다.

반대의 정도에 따라 국민기금에 찬성하는 입장, 그것에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그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는 입장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혼란 중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세가 완전히 강해졌고, 점차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위 세 입장과 세의 동향은 일본 시민들의 국민기금에 대한 인식일 뿐 아니라,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그리고 전쟁범죄 전체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1) 국민기금에 찬성·협력하는 집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재일한국인문제나 사할린 교포의 문제 등 한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활동해왔던 和田春樹, 大沼保昭 동경대 교수 등이 국민기금에 적극적인 활동가로 참여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한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군위안부 뿐 아니라 군인·군속 등의 문제로 일본의 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을 돕던 다카키 켄이치 변호사와 운동 초기부터 활동했던 '日本の戦後責任を確きりさるる會'가 국민기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사회당계의 '日本婦人會議'도 국민기금 측으로 돌아섰다. 聯合 소속의 전국 지방자치체의 직원 노조인 '自治勞'가 국민기금에 중요한 활동멤버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102만명의 노조원을 가진 영향력 있는 단체이다. 그러나 자치로의 하부조직 중 적지 않은 조직들이 상부조직인 자치로의 국민기금 참가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그간에 필자가 활동하면서 면담한 결과로 보면, 이들이 국민기금의 창설을 돕고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이것이 최상의 해

12) 자치로--46都道府縣 본부--市町村/特別區/都廳--○○區직원노동조합 의 계열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방식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아 하루 빨리 위로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지금 사회당 정부 하에서 그나마 가능한 일이므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기구를 통한 배상이 국가 배상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보다 깊은 동기는 국제적으로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손상된 일본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면담한 국민기금의 주요 멤버 중 한 사람은 “이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제한 후, “미국, 소련 등 주요 서방국들이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이 국제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피해자보다 대의명분을 중시한다고 비판하고 국민기금의 조속한 시행이 피해자를 위한 길임을 역설한다. 결국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민간차원의 피해자 원조라는 지엽적인 조치로 막아버리는 모순된 논리가 이들의 입장이다.

사회당(현재 사민당)에서 발상된 이 국민기금은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전후책임을 거부하는 극단적 보수세력과 점차 세를 잃어가는 양심적 시민운동세력의 중간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광범위하게 지지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

2) 총체적 반대의 입장

a) 국민기금의 해체를 주장하는 입장: 한국의 시민단체와 같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기금의 본질을 거부하고 그 시행을 저지하려는 소수의 그룹이 군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본 기독교 여성단체, 재일여성단체, 일본의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강력한 반대를 고수했다. 이들은 ‘つぶせ國民基金實行委員會’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어 일본정부가 비밀리에 피해자들에게 이 기금을 지급한데 항의하는 활동, 서명운동, 국제회의 개최 등, 국민기금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대체로 한국의 시민단체와 방향을 같이 해온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국민기금에 대해서 항의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기금의 지급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이니 이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 차원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필리핀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운동가를 돕는 ‘マラヤ・ロラズとともに日本軍の性暴力を問う會’ 등의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UN 등의 국제기구가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약화되기 시작한 이들 단체는 다소 자족적인 학습회의 차원에 머물고 국민기금을 반대하는 운동을 강하게 끌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반대의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의 의미가 크다.

b) 시민기금 및 진상규명 입법운동: 앞의 해체를 주장하는 집단들과 다소 겹치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이기도 하나, 국민기금을 반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순수한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이루어졌다. 1995년 8월 ‘시민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운동은 국민기금의 철회와 전후보상법의 조속한 실현을 포함한 ‘戦後報償實現キャンペーン’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

る會,’ ‘ハルモニと共に歩む會・チョガッポ,’ ‘再び従軍慰安婦をつくるな下町の會,’ ‘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福山,’ ‘フィリピン元慰安婦と共にLunas’ 등의 군위안부문제를 위한 단체와 ‘金景錫さんの日本鋼管訴訟を支える會,’ ‘日本製鐵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會,’ ‘日比連帶運動・東京’ 등의 재일한국인을 위한 운동, 폭넓은 전후보상운동 단체들과 기타 이와 관련된 단체에 속한 개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조직에 속하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이 모금에 참여했다. 이것은 모금 뿐 아니라 피해 현지 조사, 피해자들과의 교류 등의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에게 국민기금의 중지와 개인배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앞의 총체적 반대의 입장과 동일하나, 그보다 더 나아가 시민모금을 시도한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시도한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모금은 주로 필리핀의 피해자 원조에 사용되었다. 한국에 국민기금이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내는 등 (1998년 1월 7일)의 적극적 공세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에 대항하여 시민광고를 모색하기도 하고 있다.

최근 이 그룹은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국민기금과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는 점을 자성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본래의 투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중 한 움직임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운동인데,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집중하여 입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과 전후보상 진반을 위한 움직임으로 갈라져 고전하고 있다.

3) 국민기금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위에 이루어지는 운동

a) 국민기금 정부출자금에 대한 입법화 운동: 국민기금안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일단 이것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노력으로, 국민기금 중 민간모금액 외에 정부출자금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왕에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에 대하여 군위안부에 대한 지급이라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국민기금의 정부출자금을 입법화하는 한편,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진상규명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입법화를 둘러싸고 의견이 다른 몇 개의 그룹이 각기 서로 대화하지 못한 채 운동을 하고 있어서 각 그룹의 힘은 크지 못하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위해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토츠카 변호사와 처음으로 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모토오카 쇼지 의원, 전쟁책임(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의 지식인 집단과 PCA 제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던 법률가, 지식인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운동은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출자금에 대한 법안에서 범죄인정의 내용을 대신하여 “인도적 견지에서”라는 문구를 넣는 일종의 타협안이 거부되어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대만의 경우에만¹³⁾ 다소 진척되고 있다. 이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13) 대만의 경우,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민기금의 지급예정액 정도의 보상금을 미리 지급해

또는 단체들은 물론 국민기금의 본질적 잘못됨을 인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식 위에서 있지만, 일단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차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위의 총체적 반대의 입장과는 구별된다.

b) 국민기금 성격변화의 시도: 국민기금과의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되면서 국제여론도 일본정부의 로비에 의해 불리해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⁴⁾ 더욱이 일본과 한국에서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시도한 모금이 순조롭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좌절이 심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1997년 초 무렵부터 일본에서 이 문제에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식인 사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소리없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전쟁범죄의 당사자인 일본정부는 뒤로 숨고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인 국민기금과 피해자 및 시민들의 싸움으로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니, 이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국민기금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체로 목사를 포함한 한 그룹과 동경대 교수가 포함된 다른 한 그룹이 이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인으로서 이들은 국민기금에서 정부출자금과 민간모금을 분리해 그중 민간모금 분만을 가지고 순수 민간기금으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은 수순을 밟아 정식으로 행하도록 촉구하고, 민간모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구상을 국민기금 측에 제안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기금 기구 안의 사람들 간에도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그대로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기금 내에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¹⁵⁾

일본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분립·약화된 이러한 운동의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단체들이 착실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성실한 활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약하고 분립된 상황에 있다. 한국의 정대협으로 집중된 운동과 매우 다른 점으로서, 이들 일본의 각 그룹들은 각기 정대협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균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현재의 상황은 일본의 사회운동의 전반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⁶⁾

주요, 이것을 후에 정부차원의 보상이 실현될 경우 정부에서 받는다는 잠정해결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대만의 운동은 다소 여유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14) 1997년 2월 UN 인권위원회 인권소위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의 국민기금 시행을 긍정적 변화(positive step)로 규정했고, 이전에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던 많은 NGO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15) 이 새로운 지식인 집단의 제안에 대하여 한국 정대협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모금의 실패와 국민기금 측의 공세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기금의 강행을 다소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이 안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6) 일본의 여성운동의 예에 관해서는 정진성(1997)을 참고할 것.

IV.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사회운동적 배경과 운동단체들의 특징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흐름에 따라 정리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군위안부문제 해결이라는 특정 목표를 위한 운동이 어떠한 사회운동으로부터 형성되었나를 살펴보고, 운동조직의 특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운동조직들이 발간한 인쇄물과 운동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에 더해, 일본에서 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실시한 간단한 설문 조사의 결과¹⁷⁾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사회운동적 배경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여성운동과 전후에 일본에서 사회운동의 주요세력을 형성해 온 평화운동의 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밖에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활기를 찾은 재일한국인운동,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운동, 정의와 인권 문제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기독교 사회운동 및 교직원,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운동이 이 운동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1) 여성운동

앞서 본대로 일본에서 이 문제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장 먼저 가장 큰 공감을 보낸 집단은 여성이다. 이 문제를 무엇보다도 심각한 여성 인권의 침해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일본 대 구식민지 국가 또는 피점령국의 민족 문제이기도 한 이 문제를 위하여 일본의 시민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공통의 의식에서 인 것이다. 이 문제에 여성단체의 참여는 여러 갈래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여성운동을 전전으로부터 이루어져온 지역에 뿌리박은 전국지역여성조직, 그와 다소 다른 자발적인 여권단체, 노조 또는 정당과 관련된 조직, 1970년대 후반 이후 성장한 아시아 속에서의 일본여성을 파악한 단체 및 이 시기에 크게 확산된 소그룹 운동조직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정진성, 1997), 사실상 이 모든 운동의 갈래에서 이 문제에 크고 작게 참여했다.

그중 중심적인 참여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여성인권엔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를 추구해온 집단과 재일한국인여성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재일한국인 운동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16개의 전국조직과 55개의 소그룹으로 1973년에 발족한 '賣買春問題ととりくむ會'는 1980년대말 이

17) 위 국민기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단체들간의 균열은 이 조사의 응답행태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지를 보낸 50여 단체 중 20 단체에서만 응답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처음 이 문제를 위해 운동하던 단체 중 정부의 국민기금 시행에 찬성한 단체들은 이미 스스로 운동단체라기 보다는 정부를 돕는 단체로 스스로 규정하게 된 듯하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여오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했다. 이 단체에는 1940년대에 설립된 ‘日本婦人有權者聯盟’ 등 주요 전국조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일본의 오래된 여권단체들의 참여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중 1945년에 설립된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日本キリスト教婦人教風會)’와 1946년에 설립된 ‘婦人民主クラブ’ 등은 이 조직의 회원단체이지만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한국의 정대협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고, 필리핀의 피해자 단체에도 원조활동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아시아의여자들의會,’ ‘아시아여성資料센터’와 같이 새롭게 아시아여성들과 연대를 맺으며 활동해온 조직들도 이 문제에 활발히 참여했다. 지역조직 또는 전국조직의 틀에서 자란 소규모 조직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학습회 성격을 띤 ‘グループ・性と天皇制を考える’ (현재 해산됨) 등이 그것이며, 이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각양의 소그룹들은 이러한 소그룹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사회당계의 ‘日本婦人會議’ 등도 이 문제에 참여했다.

대체로 소그룹의 경우 비판의 관점이 확실하고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나, 운동의 결집력이나 지속력이 약하다. 반면 역사가 길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졌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이미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다 기존의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기에 이 문제에 도전한 것이었으므로,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의에서 찬성을 표하고 정부를 돕기 시작한 단체도 있고,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를 하는 단체들도 그 의사 표명이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국민기금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활동이 양 운동의 흐름에서 모두 확연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여성운동에서 노동운동은 주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성노동운동은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다. 뒤에 논의할 노동운동의 참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노동조합 중 공무원 노조(‘都廳職東稅地部江戸川分會 婦人部’ 등)와 교원노조(‘強制慰安婦問題を考えるネットワーク,’ ‘慰安婦問題を考える都高教有志ネットワーク’ 등)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지역여성조직으로 뿌리내린 ‘ははおやクラブ’의 일부 지역조직이나, 생협조직 중 어떤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나 모금 등으로 부분적 참여를 하기도 했으며, 적극적이지는 않다.

2) 평화운동, 전후보상운동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서 평화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이것은 학문적 차원으로부터, 법조계, 지역운동, 여성, 소수민족운동 등의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여성운동 중 아시아와 연대하는 운동도 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인 군위안부문제가 평화운동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호사 중심의 평화헌법 반대운동이나 전쟁의 재발을 위한 각종 심포지움,

원수폭 피해자를 위한 모임, 교과서 문제에 관한 모임 등에서 군위안부문제를 보다 큰 전쟁피해문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맞닿은 운동은 피해자집단인 재일 한국인 또는 중국인 및 이들을 돕는 일본인들이 만들기 시작한 전후보상운동이다. 이 운동의 싹이 튼 것은 보다 이른 시기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운동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들어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된 것은 이러한 일본의 평화운동의 맥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이 중요한 계기를 이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후보상운동은 징용, 징병, 전범, 재일 교포, 원폭 피해자 등 다양한 전쟁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연구하고 재판을 돕거나 모금을 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일한국인이 중심이 된 ‘在日の戦後報償を求める會,’ ‘戦後報償network,’ 일본인이 주도하는 ‘確きり會,’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지역의 소그룹인 ‘戦後報償を考える湘南市民の會,’ ‘かながわ’ 등이 1990년대들어 활동하는 전후보상운동 단체들이다. 위 단체들은 폭넓은 전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군위안부문제에 부딪치자 이에 큰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서로 연대하기도 한다. 특히 ‘戦後報償network,’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確きり會’ 등은 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국민기금을 둘러싸고 보인 서로 다른 반응은 매우 흥미롭다. ‘戦後報償network’가 시민기금을 설립하는 등 강한 반대운동을 벌이는데 비해, ‘戦争責任センター’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나 운동의 중점을 보다 광범위한 전후보상의 여러 문제로 옮겨가는 듯하다. ‘確きり會’는 피해자의 구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기금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 어떠한 요소가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차이가 전후보상 전반을 대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차이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전후보상운동에 이러한 입장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군위안부 문제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도 적지 않다. 보다 넓은 평화운동의 관점이 보이는 ‘もうひとつの歴史館,松代建設実行委員会,’ 군위안부 피해자 재판을 돕는 ‘戦後責任を問う關釜裁判を援する會(福岡市),’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會’ 등이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은 후인 1991년으로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에 주로 결성되었다. 다양한 직업의 구성원들이 모인 이 단체들은 일본의 학습과 강연회, 자료수집 등을 통해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군위안부 재판을 돕고, 서명운동이나 데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전후보상의 인식 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 단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민기금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재일한국인운동

가장 많은 군위안부 피해자를 낸 한국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운동도 활발한 만큼, 또다른 일본 군국주의의 한국인 피해자인 재일한국인 집단의 운동에서 이 문제를 위한 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일한국인 운동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지만, 대체로 1970년대 후반 이후, 이전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현저히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재일한국인 집단이 대개 3세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귀국 지향이 약해지고 일본에서 일본인과 차별없이 사는 것을 운동의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 남한계와 북한계의 분리도 따라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전후보상운동이 재일한국인집단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고 보여진다 (정진성, 1996). 동경, 가와사키, 오사카 등, 한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1980-90년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운동은 재일한국민주여성회와 같이 기존의 단체가 활동을 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간에 의식화되었던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이 문제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1991년 이후 이루어진 크고 작은 조직들은 한국의 단체나 연구자, 피해자들의 보고를 들은 것을 계기로, 남북계 구별없이 모여 학습하고 재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재일한국인들만으로 조직된 단체 외에 일본인 중심의 단체에도 개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로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우리의 해방도 없다'고 하는 인식 위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곳곳에서 나타나는 한국 측과 일본측의 미묘한 관점의 차이에서 재일한국인 집단은 대체로 중간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일한국인들만의 집단은 강력한 운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운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와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는 대체로 일본인들과 함께 하는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4) 지역운동

일본에서 지역에 기초한 운동의 전통은 특이하게 강하다. 대체로 전국 규모의 단체는 지역에 기초한 조직에 기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단체로서도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학습을 위해 이루어진 지역조직들이 일본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지역조직은 메이지 시기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곧 국가에 의해 간섭·장려되었고 전시에는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동원되었다. 따라서 지역에 뿌리박은 조직으로서의 보수성에 더해 국가주의적 성향까지 띄기 쉬운 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조직으로서 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는 조직이 다수 이루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ははおやクラブ’, ‘생협’, ‘AALA’ 등의 전국조직의 지역조직들이나 독립적인 지역 조직들에서 한국의 운동관계자나 피해자를 초청하거나 심포지엄을 조직하는 등의 단편적인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기존의 조직으로부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후쿠야마에서 지역의 문제를 위해 활동해오던 단체가 한국의 피해자를 초청해 증언을 들은 것을 계기로 ‘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福山’이나, 가나가와의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女たちの會’ 등은 결성 이후 여러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대표적 경우이다.

수십명 정도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이들 새로운 단체들은 학습회, 서명, 모금 등의 활동을 하며, 국민기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등, 매우 착실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에 활동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의 방향제시나 강력한 주도를 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5) 기독교운동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여성들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관여했다. 일본기독교부인 교풍회는 한국교회여성협의회와 함께 메춘관광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군위안부문제를 위한 활동을 일본에 벌이게 한 공로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한국의 정대협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정된 단체로서, 군위안부 문제가 천황 책임을 거론하면서부터 다소 소원해지다가 국민기금 반대운동에는 매우 소극적이 되어 현재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기독교 교회 중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 NCC에서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국민기금 반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다소의 개별 교회 부인회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최근 국민기금과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기독교회 목사 중 일부가 대학교수 등의 지식인들과 그룹을 이루어 국민기금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카톨릭교회 중에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다소 있으며, 세계기구에 한 부분인 ‘日本カトリック定義と平和協議會’에서 전후 50년을 계기로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기독교에 비해 이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불교 측에서 한국의 불교에서 경영하는 나눔의 집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기독교, 불교의 세력이 약한 일본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6) 노동운동

일본의 노동조합 중 군위안부 문제에 관계하는 조직은, 앞서 언급한 聯合 소속의 전국 지방자치체의 직원 노조인 자치로(自治勞)와 교직원조합이다. 자치로는 행정에 관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특히 국민기금의 모금과 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직원노조는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일본에서의 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로는 국민기금의 주요멤버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오히려 이 운동을 억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自治勞東京都本部 練馬區職員勞動組合,’ ‘都廳職東稅地部江戸川分會婦人部’ 등의 일부 하부조직들은 상부조직인 자치로의 국민기금 참가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치로의 국민기금 참가는 일본 노동운동의 대정부협조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직원노조는 일찍부터 교과서 문제 등에 참여해 왔으며 군위안부문제에도 여러 직원 노조들이 관심을 표명해 학습회, 증언집회 등을 열어왔다. 특히 이 문제를 위해 여자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0년대초에 단체를 조직한 경우도 눈에 띈다. ‘強制慰安婦問題を考えるネットワーク’ 등, 수십명 수준의 이들 소그룹은 일본의 전후책임의 하나인 이 문제를 여성의 인권침해로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판 지원이나 학습회, 국민기금 반대, 교과서 기술문제의 검토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교원노조의 형태로 또는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참여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조직들은 규모나 영향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과서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큰 흐름에의 참여나 주도의 위치에는 있지 않으며, 국민기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기타 인권운동

이밖에 일본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인권운동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인권 침해문제로 보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회운동의 맥에서 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뒤에 볼 것이지만, 이들 흐름들이 서로 원활히 연결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하나의 운동의 맥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의 단체들이 분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사회운동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일본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주요 운동단체들의 특징

위 운동단체들의 조직적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의 운동조직과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1) 설립시기

운동단체들의 설립시기를 보면 이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성단체와 이 문제를 위해 1991년으로부터 1993년 사이에 새롭게 설립된 단체가 대체로 반분된다. 짐작할 수 있는대로 기존의 단체들은 많은 회원을 가진 대규모 전국조직이거나 협의체인데 비해, 새롭게 설립된 단체들은 십수명으로부터 많은 경우 수백명의 회원을 갖춘 소그룹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기존 단체의 경우 운동의 국면이 미묘해지면서 활동이 현저히 약화되다가, 특히 국민기금을 둘러싸고는 이에 찬동하는 단체도 생기고, 반대하는 단체들도 의사표시가 소극적으로 변화해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결성된 소그룹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상호연대와 갈등을 하면서 운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운동의 사실상 주체는 따라서 지역과, 여성, 노동, 평화 등의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소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소그룹 운동조직의 특징

한국에서 기존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른 정대협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이 운동은 수많은 분립된 소그룹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규모 뿐만 아니라 조직방식에 있어서도 일본의 운동조직은 특이하다. 대체로 회장이나 대표가 없고 형식적 조직구분이 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큼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조직의 형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회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끌어낼 수 있으나, 일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 작은 그룹들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체계가 이루어져있지 않은데다 각각의 그룹들 내에도 의견을 모으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원활치 않아 보인다.

3) 연합조직의 시도와 좌절

위 소그룹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연대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나의 통일된 연합체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본대로 운동 초기에 이 문제에 관계하는 단체들이 모여 行動network를 조직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었다. 국민기금 시행 후,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간에 부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性と天皇制を考える會, NCC 등 몇 개 소그룹의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모임인 ‘つぶせ國民基金實行委員會’나 ‘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福山’를 비롯한 9개 단체와 기타 10여 단체의 개별회원이 참가한 戦後報償實現キャンペーン 등이 흩어져 있는 소그룹들의

힘을 모으고 있으나, 단체 자체의 규모가 작고 내부 그룹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밖의 다른 단체들과의 의견조정도 힘에 부치는 듯하다.

3. 운동의 쟁점

군위안부문제는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의 약소국 국민에 대한 침해이고, 전쟁중에 국가가 시민에 가한 침해의 문제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측면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지향도 단순하지 않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 강대국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의 입장, 억압적 국가를 비판하는 입장, 보다 보편적인 휴머니즘의 입장 등이 서로 얽히고 갈등도 하면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운동의 지향이 보다 복잡하다. 대체로 한국의 단체들과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점은 양국의 민족주의의 문제와 책임자 처벌 문제이며, 일본 내의 운동단체들간에서는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1) 성/민족, 인권/민족의 문제

한국의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여기에는 여성인권의 문제와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의 의식이 분리할 수없이 혼재되어 있다. 다소 분리주의적인 페미니스트 일부에서 정대협이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나 한국내에서 이 두 가치지향의 운동 경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필리핀, 대만 등의 피해국 운동단체들과도 이에 관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국제연대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특수주의적 민족주의로 비쳐지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다소 미묘하다. 한국에서 식민지 여성에 대한 착취의 문제를 제기할 때, 일본 단체에서는 식민지 여성의 문제를 강조할 경우, 군위안부로 동원된 일본여성의 문제가 희석될 위험을 문제삼는다. 1992년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한 일본여성운동가는 한국에서 민족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함께 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1993년 8월 일본정부의 2차 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의 정대협이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강제동원과 착취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다구친데 대해 일본여성단체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등이 그 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연구에서도 성과 민족의 문제를 예민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金富子, 1994 등).

그와 연관된 것으로 일본의 참여자들은 한국의 운동가와 학자들이 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식민지시기의 제반 민족문제를 거론하는 것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1993년 정대협과 일본의 '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움에서 군위안부 동원을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민족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 한국측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측 참여자들은 그것을 민족성 말살이라고 보고 민족말살과 동일시하는 것은 비약된 해석이라고 하는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예들은 이 운동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일본 내에서 이 민족주의가 어떠한 정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또한 서로 갈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책임자 처벌과 천황제의 문제

앞서 논의한 대로 초기에 협력적이던 일본단체들에서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책임자 처벌을 제기한 때부터이다. 책임자 처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을 적극적으로 한 단체 외에도, 대부분의 적극적인 운동참여자들도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이었다. 가장 확실하고도 무거운 책임자는 천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사회에서 천황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기금을 둘러싸고도 운동의 세가 반감 이상의 약화를 가져온 것은 천황제와 궁극적으로 관계있다고 하는 일본인 자신의 판단도 있다. 즉 국가배상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올바른 해결을 피하는 타협안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이다. 책임자 처벌은 그렇다 하고,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에도, 일본의 수없이 많은 전후책임의 문제가 잇달아 제기될 것인데 이것은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국은 천황제의 동요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つぶせ國民基金實行委員會,’ ‘戦後報償實現キャンペーン’ 등, 극히 소수의 단체들이 천황의 책임을 정면으로 물을 수 있을 뿐이고 결국 이 단체들이 국민기금 반대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질문에 응답한, 국민기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단체들도 ‘올바른 해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국가배상, 교과서 기재, 정부사죄, 진상구명 등의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책임자처벌을 거론한 단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가장 양심적인 일본의 참여자들에게도 책임자 처벌 문제가 무의식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진보적” 민족주의의 가능성

일본정부와 앞서 언급한 보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우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위해서일 것이다. 국민기금 시행에서 정부의 이 안에 찬동한 그룹도 결국 일본사회를 위한 해결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기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전에는 재일한국인을 위해 활동을 벌였던 일본의 최고의 지식인 중 한 사람에게 필자가 한국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물었을 때, 그는

‘그야 물론 일본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민기금에 반대도 하는 가장 진보적인 일본인 그룹도 결국은 그들의 입장이 일본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인, 한국의 운동에도 매우 친밀한 한 지식인은 ‘왜 일본의 치부를 건드리는 이 문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가’를 물은 필자에게 ‘일본을 윤리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 대답을 곧바로 했다. 이 문제에서 여성억압의 측면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 여성지식인은 천황제가 없는 일본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운동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이나 여성, 평화 등의 가치를 위해 이 운동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보편적인 가치로서 추구된다고 보다는, 그러한 가치가 일본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한국 운동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일본의 단체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파적인 입장과 반대에 서있는 진보적인 일본인들이라도 결국 일본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진보적”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처음에 이 문제에 진지하게 참여했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책임자 처벌문제로 일부 돌아서더니 국민기금 문제로는 대다수가 빠져나갔다. 이제 그 보다 더 교묘한 방안이 제안되었을 때 남은 사람을 얼마나 될까. 이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인가.

V. 맺음말

일본이 저질은 전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나선 것은 그 자체로서 일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듯 피해자와 피해국을 위한 해결이라기 보다 일본 자신을 위한 해결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애초에 이러한 일본정부의 시도에 반대했던 시민운동 세력들이 하나둘 이에 합류하여 이제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사회운동 전반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일본인들이 운동의 불씨를 지키고 있다는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다카하시 기쿠에. 1992. 「일본에서의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보고서』.
- 야마시타 영애. 1997.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 연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 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 정진성. 1995.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시기의 부채, 정신대: 일본정부와 여론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일본평론』. 제10집. 을지서적.
- _____. 1996. 「일본의 외국인운동」. 『사회과학연구』 제3권. 덕성여자대학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97. 「일본여성운동의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51집.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1-1996. 『정신대문제자료집』 1-6집.
- 후쿠시마 미즈호. 1992. 「재판투쟁에 관한 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보고서』.
- 琴秉洞. 1992. 『從軍慰安婦極秘資料集』. 東京: 綠陰書房.
- 吉見義明. 1992. 『從軍慰安婦問題』. 東京: 明石書店.
- 金富子. 1994. 「從軍慰安婦問題 - 運動とその意味」. 原ひろ子 外 編. 『ジェンダー』. No.2.
- 鈴木裕子. 1992. 『從軍慰安婦, 内鮮結婚』. 東京: 未來社.
- 賣買春問題ととりくむ會. 1996. 「日本における賣買春, 性的搾取反對活動」. 미니코미.
- 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會. 1989. 『在日韓國, 朝鮮人の報償, 人權法』. 東京: 新幹社.
- 日本辯護士聯合會. 1993. 『第36會 人權擁護大會シオジウム第1分科會實行委員會基調報告書: 日本の戦後報償』.
-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1993. 『季刊戦争責任研究』.
- 戦後報償問題研究會. 1990. 『戦後報償問題資料集, 第1集』. 미니코미.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74. 『朝鮮人強制連行, 強制労働の記録』. 東京: 現代史出版會.
- 從軍慰安婦110番 編輯委員會 編. 1992. 『從軍慰安婦 100番』. 東京: 明石書店.
- 倉橋正直. 1994. 『從軍慰安婦問題の歴史的研究』. 東京: 共榮書房.

JAPANESE PEACE MOVEMENT: SOCIAL MOVE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CHIN SUNG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social movements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hich were developed since the end of the 1980s. This paper uses the literary survey on the research papers and the prim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pamphlets of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this movement and the government publications. It also uses the interview materials enforced with the activists an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o some 50 organizations.

Four major actors of this movement in Japan can be identified: the government, right wing opinion makers, established organizations with large scale and long history, and small groups. The former two are counter powers oppressing the movement. Most of the large organizations which already had their own contents of movement and strong networks with established social parts changed their positions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y, "Asian Women's Fund" and began to help the government or very negatively make activities. Even though the movement was started by the large organizations and then small groups were formed for this issue, now is the situation that only small groups are struggling without effective network with each other.

The movement was started from the women's movement, but it has been spread to the other civil movements such as war compensation movement, the movement of Koreans in Japan, community movement, movement of christian or catholic churches, labor movement and other human rights movement. In every area of those movements the above trend of the movement appeared. That is, various small groups which ar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with different positions are making activities in the hard conditions. Those groups are divided especially toward the "Asian Women's Fund"; some are totally opposes the Fund and others are trying to find out the bargaining point.

Such conditions of the movement reflects the Japanese consciousness toward the war problems, and also reflect overall situation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where the government and communities with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play important roles.

정진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 Tel: 880-6415(O), 504-7161(H).